



“새만금 2035년 조기 완공”

새만금청, 청와대 합동 업무보고서 새만금 국가 정상화·도약 전략 발표
이 대통령, 전북 홀대론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갈등 키워”
현대차 9조 투자에 “초기 투자계획… 현 수치만으로 전체 규모 판단 성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북 홀대론’에 대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지역 갈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에 유치된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가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임을 강조하며, 이를 기점으로 새만금을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가 다른 국책 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9조원은 사업 성공 시 추가 확대 가능한 초기 투자 계획”이라며 “현재의 수치만으로 전체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임의로 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지역민에게 실망을 주기보다는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개발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은 공직

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만금 국가 정상화 및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당초 2050년으로 예정되었던 매립·조성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민간 주도 방식에서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해 169.6km 규모의 부지를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이미 지난 2월 현대차로부터 AI 데이터센터(5.8조원), 수전해 플랜트(1.0조원) 등 총 9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기존 8.1km에서 14.1km로 대폭 확대 지정했다.

입주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미래 도시 모델인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계획도 구체화했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피지컬 AI 친화 공간으로 꾸며 교통·에너지·안전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현대차가 협업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10GW까지 확대한다.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2단계 사업에는 현대차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입주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RE100 전용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형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물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남북3축 도로는 202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2027년까지 새만금 신항에 임시 터미널을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8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 청장은 보고에서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만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8회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서… “모두의 헌법으로 새 시대 열자”

18년만의 공휴일 복원 의미 강조… 국민주권의 날 제정 등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모두의 헌법으로 대한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며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40년 가까이 유지된 1987년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상징성과 제헌절의 위상을 되찾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정신을 계승한 제헌헌법은 국민주권의 출발점이었다”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국민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12·3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12·3 계엄 해제는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불악한 권력을 막아낸 세계 헌정사에서도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12월 9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지난 78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지만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은 권력구조만 규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 안전보장 계약서”라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담아내는 ‘모두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생명안전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권리 보호, 국가배상 제도 개선 등 시대적 과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올해 국회 조사에서도 국민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국회가 더 이상 시대적 과제를 미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안도 구체적

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한 뒤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헌은 정치권 중심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인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주권형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 의장은 경축사 말미에서 헌법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서 축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독일의 예를 들며 독일은 통일 후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어 30여차례나 헌법 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처한바 있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경제공동체’ 구축

민주 김의겸 의원, 새만금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6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RE100·그린수소·스마트 시티·로봇 등 미래 산업업 공동 육성 △새만금 상생공동펀드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를 상향



등 재정 특례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권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최민희·허성무·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호기자·군산·김제·부안 기자

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부안군의의회

제10대 부안군의의회

이 현 기
의 장

오 장 환
부의장/자치행정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

임 정 숙
의회운영위원장/산업건설위원

송 회 복
자치행정위원장

김 정 군
산업건설위원장

이 강 세
자치행정위원

장 은 아
자치행정위원/의회운영위원

김 두 례
산업건설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

김 원 진
산업건설위원

박 태 수
자치행정위원/의회운영부위원장